

2024 미국, EU 방위산업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의

마정목(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및 국방과학학부 교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함형필(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2024 미국, EU 방위산업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의



마정목(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및 국방과학학부 교수)

- 다중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 대륙이 군사비를 확충하는 등 방위산업의 기회요인 증가
- 미국과 EU는 최근 각각 방위산업전략의 발표를 통해 국가 혹은 연합 차원의 방산 역량 확대 시도
- K-방산은 내수중심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의 방산 구조 전환을 위한 결정적 시간 앞에 놓여있으며,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윈-윈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방산 생태계 전략 수립 필요
- '지속가능한 혁신적 방산 생태계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전략 제시

K-방산과 민주주의의 무기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립주의 여론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가 되어야 합니다(We must be 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라고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론을 자처하면서 참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연합국에 대

1) 국방일보 “정부·민간 혁신 생태계 구축 안보·경제 두 토끼 잡아야”(24.7.16)를 기초로 제작성함

한 군수물자 지원이 4년 이상 지속되었고, 승전을 통해 미국은 초강대국의 권위를 얻기 시작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대공항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말 그대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 것이다. 전쟁수행 물자를 생산 및 공급하는 군수산업(arms industry) 혹은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이처럼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모두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2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의 불안정이 심화될 때 전쟁의 당사국은 물론이고, 인접 및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평화 기간에 비워진 자국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올해 4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특히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개 대륙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방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중 한국의 K-방산은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불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2023년 대비 8개국에 증가한 12개국으로 대상국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한국은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로 세계 9위(2.4%)이며,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인 미국(40%), 러시아(16%), 프랑스(11%)를 제외한 4~8위 국가들과 격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고, 그 실현 전략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무기 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한국의 ‘민주주의의 무기 고’ 역할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K-방산은 수출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산 역량을 구축하면서도 방산수출에 따른 안보 및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원조 물자에서 시작하여, 내수시장 중심의 한계에 봉착하였던 K-방산이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안보와 경제라는 복잡한 셈법을 계산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국은 2024년 1월에 사상 최초로 방위산업전략서(NDIS: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3월 유럽연합(EU)은 유럽 방위산업전략서(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전략을 통해 4대 방산수출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역사적 변곡점 앞에 서 있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본다.

2024 미국 방위산업전략서(NDIS)

미 국방부는 2022 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연계하여 발표한 2022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위협받는 국제질서 상황을 적시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NDIS는 통합 억제의 핵심인 방산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 전체를 뛰어넘는 산업 강국으로 발전했지만, 미국은 1985~2021년 사이 GDP 대비 국방비가 5.8%에서 3.2%로 축소되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전쟁에서 비롯된 군수물자(155mm 포병탄 등 재래식 군수품으로부터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의 급격한 생산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NDIS는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군사력이 경제력(산업 역량)에 의존함을 강조하고 있다. NDIS의 목표는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갈등에 의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ies)를 제시함으로써, 재래식 전력의 성능 개량과 탄력적 생산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차세대 능력의 획득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강건하고(robust) 탄력적이며(resilient) 역동적인(dynamic) 현대적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방산 생태계는 미국 정부 전체와 민간 부문은 물

론이고, 국제 방산 생태계의 일부로서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60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 4가지와 해당 전략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탄력적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s): 방위산업기반(DIB: Defense Industrial Base)은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수요를 적시에, 원하는 규모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산업체의 추가 생산 능력 투자 장려
- 재고 및 비축계획 관리를 통한 단기 위험 감소
- 국내 생산 지원 지속 확대
- 공급자 다양화와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한 투자
- 데이터 분석학 활용 공급망 위협 요인 최소화
- 동맹국 협력에 따른 공급망 탄력성 강화
- 대외군사판매 프로세스 개선
- 방위산업기반 사이버 보안 강화

2. 방산인력 준비(Workforce Readiness): 다양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인력 준비
- 제조/STEM 분야에서 국방 필수 기술 지속 확보
- 견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산업체 경력에 대한 인식 제고
- 인력 모집의 다양화 확대

3. 유연한 획득(Flexible Acquisition): 방산물자의 효율성, 정비도, 맞춤화, 표준화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동적 능력을 추구하는 획득 전략을 수립한다.

- 플랫폼 표준 및 상호운용성 확대
- 무분별한 범위 확대(scope creep) 방지
- 상용품에 우선권 부여
-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 권리 접근성 향상
- 계약 전략의 확대 및 정책 개혁
- 획득 개혁 지속 지원
- 산업동원 관련 업데이트를 통한 대비태세 확립

4. 경제적 억제(Economic Deterrence): 경제안보와 통합 억제에 기여하고, 미국과 동맹국 간

의 탄력적 방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장 매커니즘을 갖춘다.

- 경제안보 협정 강화
- 국제 상호운용성 표준 수립
- 과학과 기술 공유를 위한 연대 강화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단속 강화
- ‘금지된 물자(prohibited source)’ 사용 거부 정책 강화

2024 유럽 방위산업전략서(EDIS)

유럽에서는 러-우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군사 및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이끌고 있는 미국도 소위 ‘전략적 동시성’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 결과에 따라 집단방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DIS를 발표함으로써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EU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졌다.

집행위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약 78%의 방산물자를 역외에서 수입하였고, 이중 대미 수입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약 20%에 불과한 유럽산 무기 조달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방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EDIS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EU 역내 방산 거래 비중을 최소 35%로 늘린다.
2. 방위 투자액의 최소 50%를 역내 조달에 투입하고 2035년까지 60%로 확대한다.
3. 방산 장비의 최소 40%를 회원국 공동조달로 확보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30여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으며, 섹션 제목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즉응력 있고 유연하며 혁신적인 유럽 방산 역량 확보를 통한 방위태세 달성
2. 더 많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유럽 방산에 투자

3. 긴급 소요 대응력 증진
4. 예산 편성 및 자원 마련
5. EU의 다양한 정책 속 방위태세 인식 제고
6. 우크라이나, NATO, 전략적 파트너 국가와 안보 협력

K-방산에 주는 함의: 지속가능한 혁신적 방산 생태계로의 대전환

K-방산은 전쟁의 진통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주도 아래 탄생하여 짧은 시간에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 생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생존시스템으로서의 방위산업을 단순히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는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더불어 방산 비리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방산분야의 청렴성이 매우 강조되었고, 2006년 정부를 중심으로 한 방위사업법의 제정과 함께 방산분야는 더욱 경직성을 띠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 중심인 방위사업과 민간의 생산 중심인 방위산업을 함께 고려한 방산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EU의 방위산업전략과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이라는 한국의 방산 목표를 바탕으로 필자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방산 생태계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혁신적 방산 생태계’는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방산과 관련한 많은 행위자가 불확실한 변화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을 의미한다.

‘혁신적 방산 생태계’라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방산업체가 국가 존립의 필수인 방산 내수시장의 유지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방산수출을 통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방산수출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소비자를 종속시키는 락인(lock-in) 효과, 한반도 위기상황에서의 바이백(buy-back) 옵션 등 단순히 방산업체의 이윤을 높이는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미국과 EU의 방위산업전략에서 내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국제협력과의 균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전쟁에 동원되는 군수산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평화산업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강조를 위한 안보 협력 및 외교 패키지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에 방산수출을 한다는 것은 방산물자의 긴 수명기간 동안 다양한 평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뛰어넘어 장기적 상호호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여외교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 증진을 위한 촉진제로 삼아야 한다.

‘거버넌스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자체가 정부라는 단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방산수출이 G2G(정부 간 거래)라는 점에서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부 기관은 미국과 같이 유연한 획득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과 같은 전략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K-방산 생태계에 유연성과 함께 확장된 활동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에도 유연한 획득을 위해서 신속소요, 신속시범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소요와 미연계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전략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전략서, 가칭 KDIS(Kor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구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K-방산이 한국의 안보(한반도, 인·태, 글로벌 평화)와 경제(국가 성장 동력)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을 동시에 전인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함형필(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한반도에서 한미 핵·재래식전력 통합(CNI)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관련 지침
- 적국의 CNI 전력의 전장 배치를 방해, 동맹의 CNI 실행은 보장하며, 재래식 분쟁에서의 핵공격을 준비
- 한국의 전략사 창설과 연계하여 한미 CNI 개념 및 구체적 방안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훈련, 작전을 수행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한미 공동지침)을 승인하였다. 한미 공동지침은 향후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는 능력을 확충하는 등 한미 공동의 북핵 대응 태세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¹⁾

한미 공동지침은 한반도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이하 한미 CNI)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첫째, 한미 CNI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위기시 한미 정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즉각적인 핵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한미 CNI 개념

과 방안 발전을 위한 공동기획 절차 적용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확장억제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기획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이 제공된다. 넷째, 한미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TTS(시뮬레이션), 국방·군사 TTX(토의식연습) 등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한다. 또한 미국의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 및 훈련을 추진한다.

요컨대, 한미는 공동지침을 통해 CNI 기반 체계 구축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전례 없는 확장억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 미국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핵운용을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와의 핵운용 협의를 약속한 것이다.

1) 국방부. “NCG 공동지침 설명자료.” 국방부 출입기자단 설명자료. 2024.7.11.

왜 핵·재래식 통합(CNI)인가?

냉전 이후 미국은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명확하게 구분해 왔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에서 전략사령부가 핵전력을 전담하여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다. 이와 달리 재래식전력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6개의 지역통합사령부가 운용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한반도에서도 재래식전력을 운용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전략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하는 형태의 태세가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전술핵무기(비전략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중용도(핵·재래식) 미사일을 다수 운용함에 따라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CNI 개념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는 재래식 분쟁에서 핵무기를 이용하여 분쟁을 제한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분열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재래식전력으로 작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핵전력을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를 위해 다양한 이중용도 비전략 핵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하여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동시 운용 태세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 핵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제한 핵위협을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안을 두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CNI 적용으로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억제력을 배가하고자 한다. 적국의 CNI 전력은 전장에 배치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미군의 CNI 실행을 보장하며, 재래식 분쟁에서도 핵공격 준비를 보장하기를 원한다. 특히 미국은 제한 핵전 상황에서의 억제 및 억제 실패시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전투사령관의 분쟁 위기 관리 및 핵사용 억제 노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연속되고 통합된 억제방안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의 회복탄력성과 생존성을 보장하여 적국의 핵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미에 비해 재래식전력이 열세한 북한은 전술 핵무기 역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중용도 미

사일들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재래식전력으로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핵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정립하고 전쟁준비태세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및 주변 상황의 변화가 한미 CNI 채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첨단 재래식전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범적인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함께 CNI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 CNI 발전을 위한 협력 범위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접근법은 북한의 핵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사용 이전 단계에서의 억제와 사용 이후, 즉 억제 실패시 대응단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북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전력과 미국의 핵 및 재래식전력의 통합 운용을 통한 전략적 효과는 억제뿐 아니라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연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CNI는 특정한 전력 운용의 방식으로서 접근뿐 아니라 동맹의 전력태세, 기획, 작전 활동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맹의 연속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으로서 인식이 요망된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동맹의 확장억제 협력 방향을 조정해 온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는 앞으로 한미 CNI 개념 및 방안 발전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CNI는 정책·전략적 수준에서는 동맹의 군사력 통합을 의미하지만, 군사·작전적으로는 전장에서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의 통합 운용을 통한 작전적 효과 창출에 맥이 닿아 있다. 그러므로 한미 CNI는 핵 및 재래식전력이 통합 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작전 유형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별 기획과정을 통해 실행력을 갖춘 작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미 CNI 작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CNI 억제작전이다.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은 전·평시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전력의 통합 운용을 통한 억제 메시

지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북한의 특정 핵도발에 대한 맞춤형 억제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전력 운용 관련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임무와 역할 분담 노력이 요망된다.

두 번째, CNI 대응작전이다. 북한의 핵사용에 관한 일차적인 억제 노력이 실패한 후, 억제력을 신속하게 복원하고 추가적인 핵사용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동맹의 통합된 대응작전은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사용 이후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함께 운용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기획이 고려될 것이다.

세 번째,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이다. 미국의 한반도 핵작전은 양국 통수권자의 협의 및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미 공동기획 또는 협의를 거쳐 수행되는 미국 핵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에는 감시 및 정찰지원, 정보제공, 군수 지원, 엄호 및 경계 지원, 우주 및 사이버 지원, 시설 지원, 방공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네 번째, 유사시 한미 연합 또는 한국의 재래식 작전의 지속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핵작전 지원이다. 재래식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핵작전 또는 핵자산 운용의 역할은 핵공격 억제뿐 아니라 확전통제, 억제력 복원, 주변국 견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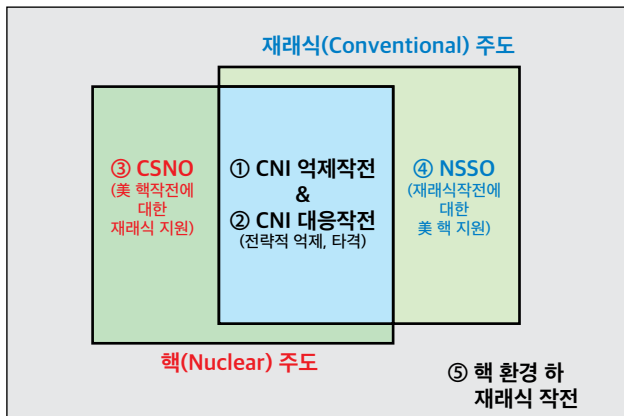


그림 1. 한미 핵·재래식통합(CNI) 작전 유형²⁾

2) 함형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의의와 향후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경세분석, 2024.8.12

마지막으로, 핵 환경 하 재래식 작전이다. 유사시 한반도 작전환경은 핵폭발에 따른 방사능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대부분의 작전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래식전력의 생존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은 동맹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미 CNI 개념 및 방안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공동지침의 이행을 통해 한미 CNI는 점차 구체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CNI 발전은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전략 변화, 대외 및 대남정책 변화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되어야 한다.³⁾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역량 확보, 생존 가능한 2격 능력 확보, 북·러 기술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발전 양상 등에 한미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는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성 우려가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능력 확보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핵능력 고도화 수준에 따라 한미 CNI 개념 및 방안 발전의 구체화 정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한미 CNI 발전은 우선 한반도에 한정해서 고려되지만, 미·중 전략경쟁 및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 간 3자 억제 도전과 연계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북·러 및 북·중 군사동맹 관계, 대만 유사사태 발생, 중·러가 연계된 기회주의적 분쟁 발생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미 CNI 작전에 따른 메시지 발신과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한미는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분쟁에 따른 동맹의 정치적 목표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 식별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한미 CNI 작전은 정치·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측면의 군사력 통합 운용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

3) 전재성, “핵억제·핵작전 공동 지침의 의미”, 국민일보 기고문, 2024.8.6.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CNI 작전은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한미 CNI는 억제태세, 기획, 방안, 연습·훈련 등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으로부터 실행력을 갖추는 단계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한미 CNI가 군사작전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한미 양국군이 이를 충분히 숙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대북 억제 효과가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미는 유사시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전력 대응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CNI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수권 차원의 결심까지 확보한 후 실행하는 일련의 기획 활동 및 과정에 관한 제도적 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미 양국은 한국의 전략사 창설에 맞춰 한미 CNI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국의 전략사는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략 무기만을 운용하지만, 임무 영역과 역할 측면에서는 미국의 전략사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한미 전략사 차원의 협력은 그 자체로 CNI를 구현하기 때문에 한미 CNI 발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이미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과 관련한 발표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사를 미국의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하여 한미 CNI 개념 및 방안 발전과 이와 연계된 연습 및 훈련 실시를 주도하는 사령부라고 밝힌 바 있다.⁴⁾

맺음말

한미 공동지침은 그간의 정책적 수준의 확장 억제 협력을 새로운 군사작전적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전력 운용 및 핵작전은 공식화되었고 제도적 협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은 평시와 전시에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부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은 핵 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공동 기획, 작전 활동, 연습·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

력을 확충하고 한반도 맞춤형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다.

한미 공동지침 이행을 통해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의 강화가 모든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 우선,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전달하는 소통이 중요하다. 억제력 강화와 함께 대북 소통의 중요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또한 동맹의 군사력 통합 노력은 통합의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위협의 분담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미 CNI 개념 및 방안 발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가운데 주도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보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국방부,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 설명자료”, 2024.7.30.